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野 '추가 입법' 압박

양곡관리법 논란

여야, 총선 1년 앞두고 끝장대치尹 대통령, 지난해 반대 의사 밝혀 '강행→거부권' 악순환 반복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되면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는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정부와 여당도 반대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약속 기자회견에서 "(쌀)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은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시

그러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엔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이 되는 법안들까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여야 협치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의요구로 법률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새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

도 여야 입장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도 3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의 부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도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대치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내부 결속력을 다지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명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전국 9개 선거구 130만명 투표 '전주시을·창녕군수' 이목집중

4·5 재보궐선거

31일부터 사전투표 돌입 울산교육감, 선거인 최대규모

오는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르며, 130여만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격으로 보고 지원 사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인수가 130만9677명(인구수 150만2971명 가운데 84.88%)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4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단체장·지방의원 선거구가 중복되는 경우 지방의원 선거인 수는 제외한 숫자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9곳에서 치른다. 먼저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경북 포항시 나)을 포함해 총 3곳에서 치른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광역시),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 제4·경남 창녕군 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 나·충북 청주시 나)으로 모두 6곳에서 치른다.

선거인 수로만 봤을 때 가장 큰 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선거인 수는 93만7216명이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 포항시 나 기초의원 선거다. 선거인 수는 1만8179명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곳



4·5 재보궐선거를 앞둔 24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 벽보가 걸려 있다.

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잘못으로 선거를 치르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꼽을 수 있다. 양당 모두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창녕군수 보궐선거, 민주당의 경우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각각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먼저,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창녕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민주당 성기욱 후보, 무소속 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재·하강돈·한정우 후보(기호순) 등 모두 7명이 출마해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공천 결정을 내리면서 지원 유세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을 받게 돼 치른다. 민주당 지도부도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 취지에 따라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 임정엽·김광중·안해욱·김호서 후보(기호순) 등 모두 6명이 출마해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23일 전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지역 발전과 함께 소속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권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발송 안내문으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민주당, 극성 지지층 집단행동 '홍역'

체포동의안 표결 후 계파 갈등 고조 색출작업, 현장시위 등 공격 극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극성 지지층 중심의 집단 행동이 당 내부 갈등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측은 메시지를 내며 극성 지지층에게 자제를 당부했으나, 이들을 옹호하는 일부 친이재명계와 이들을 당내 민주주의 저해 요소로 여기는 비이재명계의 간극은 명확하다.

이른바 개팔(개혁의팔),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은 지난 24일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화성시 지역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반대하며 그를 이 대표를 배신한 인물로 규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확인되자 극성 지지층의 비이재명계를 향한 수박(비이재명계) 색출작업과 공격은 극심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이제 개팔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의 메시지가 나온 지 약 5시간 만에 SNS에 글을 올려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 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세 세력과 싸워달라"고 설득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와 최후의 2인으로 선거를 치른 박용진 의원의 강북구 지역사무실에도 지난 25일 1인 시위자가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피켓을 든 이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런 행동이 과연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가. 흑시 자기만

족적인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피켓엔 '당신의 공격 대상은 검찰총장이지 당 대표나 열성 당원이 아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더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박 의원은 24일엔 이원욱 의원을 향한 극성 지지층의 시위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팔과 헤어질 결심이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용기 내자.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같은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극성 지지자와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허구적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된다"면서 "(개팔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당원도 있고 당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은 극성 지지층과 비이재명계의 내용을 우려하며 당이 단결과 화합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김상희, 정성호,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단결과 총선 승리"라며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경찰 버스에 올라간 강경 시위자에게 시민들이 내려오라고 소리친 것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이번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엔 비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민주당 4선 의원이 참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